

보도 설명자료 (‘19. 4. 2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ESS 화재 사고 원인 규명과 중장기 재생에너지
발전비중 목표 달성 여부는 직접 관련 없음

(조선일보 4.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ESS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ESS 안전 대책 및 생태계 육성방안도 마련 중에 있음
- ◇ ESS 안전문제는 신기술의 안정화 측면에서 신속하게 극복해야 할 문제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(안)에서 제시한 장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달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음
- ◇ 4월22일 조선일보, < ESS 절반 가동 중단됐는데...태양광·풍력 늘리겠다는 정부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1. 보도 내용

- ‘사고 원인 조사위원회’ 3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곳에서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고,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재생에너지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
-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ESS 화재나 폭발 위험 등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채 재생에너지를 크게 늘리겠다는 것은 불가능

2. 설명 내용

- 올해 1월 출범한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조사위원회가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, 동시에 정부는 ESS 안전대책과 ESS 생태계 육성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

○ 현재 ESS 화재사고 조사위원회는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·분석을 마치고, 분석결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시험·실증을 진행 중에 있음

○ 상반기 중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ESS 안전대책과 생태계 육성방안을 함께 발표할 계획임

-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포함한 ESS 안전문제는 신기술의 안정화 측면에서 신속하게 극복해야 할 문제이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(안)에서 제시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~35%는 장기적인 목표로 3020 이행계획의 추세, 입지 잠재량* 등을 고려할 때 달성 가능하므로 ESS 화재 사고 원인 규명과 장기 목표 달성 여부는 직접 관련이 없음

* 염해농지 등 휴경지, 건축물·시설 옥상 등 단기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태양광·풍력 우선 공급가능잠재량은 155~235GW 수준으로 입지잠재량 충분

- ESS 안전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하고,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 수단으로서 ESS 활용이 확대되고 ESS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

※ 문의 : 에너지혁신정책과 박재영 과장/성시내 서기관(044-203-5121)
국표원 제품안전정책과 이귀현 과장/박해범 사무관(043-870-5418)
신재생에너지정책과 이용필 과장/양정식 사무관(044-203-5361)
에너지안전과 이희원 과장/박성민 사무관(044-203-5273)
전자전기와 이진광 과장/김진수 서기관(044-203-4346)
분산에너지과 이경훈 과장/박상호 사무관(044-203-5198)